

공공 용어 번역의 현황과 과제

최혜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1. 왜 공공 번역인가

1.1. 국어 정책에서 다언어 정책으로

다문화 시대의 도래, 영어 공용어론의 대두 등 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어 기본법은 한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해 제정되었다.¹⁾ 이전의 어문 규범, 국어 순화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국어 기본법은 한국어 보급과 국민의 국어 능력, 언어의 공공성 향상 등에 그 초점을 옮기게 된다.

특히, ‘언어의 공공성 향상’은 국어 정책이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편의와 실용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주요 과제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주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쉽고 정확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이지 않아’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 국어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문 규범, 국어 연구 중심에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언어 사용에 초점이 옮겨졌지만 오랫동안 국어(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또는 한국어 사용자)이 주요 정책 대상인 국어 중심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국어 외의 다른 언어 문제는 정책의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다른 여러 분야의 상황과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어 정책은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어 정책은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국어만의 어문 정책이 아닌 다언어 대상 정책²⁾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문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 정책 연구’(2013)에서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국내외 언어 환경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유통에 적합한 언어 역량 강화가 현 단계 국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번역을 통한 국내외 정보 및 문화 유통 실태 조사’와 ‘번역 언어 및 분야 다양화 정책’, ‘공공 번역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어 기본법의 기본 목적인

2)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한다(2013년 6월). 이는 언어 인권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과 외국인의 모국어 보전 지원 등 국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괄적 언어 자원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대변한다.

• 연간 국가별 입국자 수(2013년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 한국관광공사)

거주국	인원	거주국	인원
일본	2,695,910	캐나다	120,458
중국	3,785,076	영국	105,454
홍콩	390,930	독일	85,729
대만	532,721	프랑스	66,685
싱가포르	157,444	러시아	116,872
태국	310,956	중동	117,889
말레이시아	186,941	인도	60,011
호주	113,082	기타	833,763
미국	664,497	계	10,344,418

국어 사용 촉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언어 사용 전반에 대한 언어 정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올해 초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2014. 2. 17.)’에도 반영되어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공공 용어의 번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기에 이른다.

1.2. 공공 번역 왜 필요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번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무수히 많은 공공 번역물이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류 등 문화 교류의 확대로 문화와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번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 분야 번역은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시장 원리에 의해 번역 수요가 창출되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나 소수 언어권 번역에 대한 지원은 더더욱 그렇다.

번역은 정보와 기술 교류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로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inbound)과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outbound) 두 가지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 사회 국가들의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대중문화 등을 수입하여 이를 사회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전문 지식의 유통은 더욱 증가하여 전문 용어 수용이 증대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언어의 제약을 느끼지 않고 모국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번역 정책은 정보의 대중화에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언어를 통해 우리 것을 알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 하는 노력 가운데 번역은 그 중심점에 선다. 이제 고유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발전시켜 온 문화 전통과 유산을 세계에 소개하고

교류하고 나눔으로써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의 균형을 잡아가는 단계로 전환할 시기에 이르렀다.

번역에서 정보 전달과 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직접적인 수단³⁾이 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문화 전통에 대해 갖게 되는 이미지나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공공 번역은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문화 융성 또한 효율적인 번역을 통해 국제 교류, 지식산업³⁾의 선진화 등을 구현할 수 있다.

1.3. 공공 번역에서 단일 구축 체계의 필요성

공공 번역이 사회적으로 중요함에도 공공 번역을 일반적 시장 원리에만 맡겨둘 경우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수급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동안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 없이 수급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져 왔다.

분야별 번역 기준이나 지침의 부재는 문화 교류·홍보에서 기본 자원인 문화재, 관광, 한국어 용어 등에서도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표기를 양산하고 동일한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른 번역어를 제시하여 내·외국인에게 불편함⁴⁾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번역 관리 시스템⁵⁾ 및 번역 전담 기구⁶⁾의

3) 산업 번역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번역원(2012년 설립)이 번역 서비스, 산업 번역가 양성, 번역 업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4) 문화재, 음식, 지명 등 공공 용어의 서로 다른 번역 및 오번역 표기

한국어 → 외국어	(문화재) 대웅전 → Main Hall(한국관광공사) Daeungjeon Hall(문화재청) Hall of Sakyamuni(서울시)
외국어 → 한국어	(지명) 瀬戸内海 → 세토내해(법제처 누리집) 세토나카이(조선일보 누리집)

부재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는데, 공공 번역의 기획, 생산, 평가 및 감수에 이르기까지 번역 과정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로 질 낮은 번역, 번역 결과물의 일관성 결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번역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요에 기초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필요에 따라 정부 부처별 또는 그 소속 기관별로 번역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각 부처별 번역 수급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관리 부재로 인해 공공 번역의 중복이 빈번히 발생하고 관련 연구들 역시 중복 발주되는 실정이다.

1.4. 국립국어원의 공공 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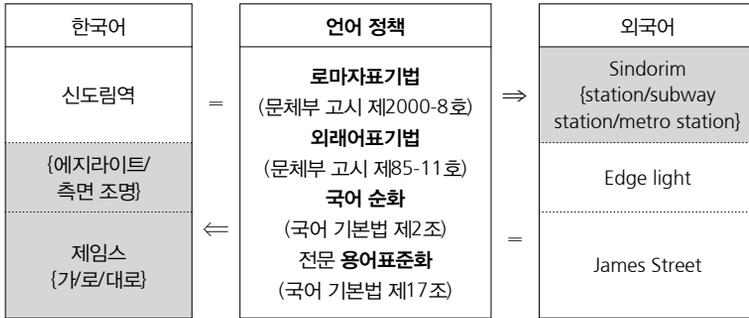
국립국어원은 지명·인명, 시설 및 기구·기관명, 한국 고유문화 관련 용어 등 공공 용어 번역에 필요한 로마자 표기에 대한 감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외교부의 여권 인명 표기, 국토교통부의 지명 표기, 문화재청의 문화재 용어, 서울특별시의 외국어 표기,⁷⁾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용어 표기 등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의 표기, 번역 작업에 참여해 왔다.⁸⁾

5) ‘국내 공공 기관의 번역 현황(2001)’에서는 효율적인 번역 환경 구축을 위해 공공 기관의 번역 업무 처리 창구 일원화, 기존 번역 자료의 목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번역 공급 정책으로의 전환, 번역 표준 처리 절차 개발, 전문 분야 번역 인력 양성 및 체계적 관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6) 중국, 캐나다 등은 공공 용어·문서 번역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1955년에 국무원 어문번역연구소를 설립하였고, 캐나다는 1934년에 공공사업 및 행정서비스부 번역국을 설립하였다.

7) 서울시가 제공하는 외국어 표기 사전(dictionary.seoul.go.kr) 사이트는 행정 기관, 공공 기관, 자연 지명, 교통, 관광 문화, 음식, 숙박, 교육 등 12개 범주로 나누어 외국어 표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국어원의 기존 용어(번역) 표준화 업무



한편으로 외국어에서 온 전문 용어의 올바른 표기 및 표기의 단일화, 우리말로 다듬기 등의 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좁게는 국어 정책이라는 범위에서 국어 사용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언어와 언어 사이의 소통 즉 번역의 일부분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는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등) 편찬 등 번역 관련 업무⁸⁾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

8)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표적 번역 기관인 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매력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내부 직원의 일관된 번역이 아닌 외주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번역가의 선택과 개성에 따라 번역 용어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즉, 용어의 공공성이나 소통보다는 번역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 번역	문학 번역
주요 기능	(전문)용어 표준화	텍스트(문장) 번역
가치	공공성 · 소통	표현의 자유

러한 작업은 기존의 맞춤법, 표준어 정책 등 어문 정책 업무 추진 방식과 동일하게 번역 표준화를 담당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2016년 공개 예정인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사전(‘우리말샘’)으로 번역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인 대국민 보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 번역에서 로마자(영문) 표기, 용어 다듬기 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국어 정책에서 다언어 정책으로의 확장 등 기관의 정체성 변화를 모색 중이다. 어문 정책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어문 정책의 이원화(로마자 표기와 한국어→외국어 번역, 전문 용어 표준화와 외국어→한국어 번역)를 막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지난 2013년부터 ‘공공 언어’ 사업의 일부로 공공 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한식명에 대한 표준화 작업(한국관광공사·한식재단 공동) 등 공공 번역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¹⁰⁾ 이후에도 문화, 관광, 공공 명칭 등에 관한 외국어 표기 및 번역과 관련해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기관 간 동일 분야 용어에 대한 조정을 꾀할 계획이다.

9) 국립국어원의 번역 관련 사업

사업명	내용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 구축	기초 5만 개 어휘에 대한 한국어 대 10개 외국어 사전 개발(2010~2015)
다국어 버전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초중급 한국어교재(8개 언어) 편찬 온라인화 및 방송 강좌화(2008~2015)
로마자 표기 보급	자연 지형명·시설명 등의 표기 번역 용어(한→영) 보급(2010년 이후)
국어 순화	역대 순화 대상어 중 서양어나 일본어 비율 46% 정도 *국어 순화가 사실상 용어 번역(외국어→한국어) 성격임

10) 국어원은 올해 5월 2일 영어·중국어·일본어 한식명 200개에 대한 번역 표준안을 발표하였다.

2. 공공 기관의 번역 실태

한국 고유의 용어, 개념 등의 활용이 많은 38개 문화 관광, 기초 예술, 한국학 연구 기관의 번역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한 “공공 기관 번역 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2007)”에서는 각 기관의 외국과의 주요 교류¹¹⁾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중앙 정부 등에서는 주로 업무 협조 혹은 기술, 정보, 자료의 교류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의 순으로 교류하고 있고, 지자체는 자매결연을 통해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정기적 보고서를 번역물로 출판하는 중앙 정부조차도 상근 번역사나 번역 전담 부서가 없는 곳이 48.4%나 되었고, 외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진 지자체의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은 번역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일반 번역물 감수의 경우, 외국어에 능통한 감수자가 번역의 질을 평가하고 감수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공공 기관 번역의 경우,

[표 1] 공공 기관 국가별 교류 성격

기관	중앙 정부	공사 등 국영기업	지자체	연구 기관	단체, 협회
대표 교류국	미국(59%)	미국(35.4%)	중국(50%)	미국(50%)	미국(40.5%)
교류 성격	업무상 협조	기술 정보 교류	자매결연	기술 정보 교류	기술 정보 교류

11) 공공 기관의 국가별 교류 현황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호주
빈도수	135(16.8%)	124(15.5%)	79(10.0%)	22(2.7%)	18(2.2%)	12(1.5%)

번역물 내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언어적 측면에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의 공동 감수가 필요한데 인적, 재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번역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감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결과물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주요 불만족 이유로는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원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 부적절한 용어 및 표현 사용, 용어 표기의 통일성 및 일관성 결여 등 공공 기관 번역사 역량, 감수 과정과 관련이 있다. 용어 표기의 일관성 및 통일성 결여는 번역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작업이 시행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으므로, 용어 표기를 통일하고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및 표현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공공 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2013)”에서는 중앙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문화 관광 관련 기관, 기초 예술 관련 기관, 한국학 관련 기관 등 총 30개 공공 기관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웹 페이지를 대상으로 번역 결과물의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웹 사이트는 외국인들이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웹 사이트의 번역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관습에 위배되거나 수용성이 떨어지는 어색한 번역이 아직도 많이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관 외국어 웹 사이트의 경우 중국어 웹 사이트임에도 번역 용어가 일본어에 준하여 표기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해당 언어에 맞는 한자어를 사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자어가 섞여 쓰이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일부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나 한식명의 음가를 전달하기 위한 음차 번역이 의도하는 발음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언어를 통틀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번역의 문제는 인명, 지명, 문화재명, 시설명, 문화 용어 등 용어 번역의 일관성 결여다.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현상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번역은 물론이고 동일 기관 웹 사이트 안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3. 공공 번역의 대상과 용어 번역 현황

3.1 공공 번역의 정의

“공공 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2013)”에서는 공공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즉 공공 번역을 번역의 목적, 주체와 대상, 예산의 출처 등을 고려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 공공 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이라고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공 번역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 ① 공공 번역은 국가 공공 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번역이다.
- ② 공공 번역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적 용도의 번역이라면 설사 국가 공공 기관의 예산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공공 번역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
- ③ 공공 번역은 익명의 광범위한 대중에 의해 사용되는 번역이다. 번역

사용자의 범위는 공공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된다.

- ④ 공공 번역은 시장 원리에 따른 수요·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번역이다. 바꿔 말해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나 수익성이 뒤떨어지는 번역이다.

공공성을 지닌 번역이 별도로 개념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번역이 민간 분야 번역과는 다른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전달과 소통으로 충분한 민간 번역과 달리 공공성을 띤 번역은 정보 전달의 요구 수준이 더욱 높으며, 더 나아가 민간 분야 번역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 번역 결과물은 그 영향이 일반 민간 분야 번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될 만큼 중요하며 파장도 크다. 외교 문서나 법률 등의 번역은 중요한 국제 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 콘텐츠의 번역 수준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3.2 공공 번역의 범위와 표준화 대상

공공 번역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 용어’와 ‘공공 문서’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 번역의 우선적인 대상은 ‘공공 문서’이고, ‘공공 문서’를 번역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에는 필연적으로 ‘공공 용어’가 포함된다.

공공 용어는 법령·행정 용어, 국토·교통 용어, 자연·관광 용어, 역사·문화 용어를 망라한다. 반면 공공 문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문서로서, 그 중요성에 따라 다시 여러 층위의 공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범주 외에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 번역 수요

[표 2] 공공 용어와 공공 문서의 범위

공공 용어	▲ 법령· 행정 용어(관공서명, 부서명, 직책명 등) ▲ 자연지형 용어(산, 강, 바다 등) ▲ 국토, 교통 용어(도로, 항만, 교차로 등) ▲ 관광지명(온천, 휴양림, 민속촌 등) ▲ 역사 용어(왕조, 사건, 제도 등) ▲ 문화 용어(복식, 음식, 문화재 등) ▲ 민간 공공단체명(정부기관, 은행, 민간기구 등) ▲ 기타 한국학 용어, 전문 용어 등
공공 문서 ¹²⁾	정부 차원의 공문서 (제1 범주) 헌법, 대통령 연설문, 국가 간 조약문 등 중앙 정부 차원의 상징적 문건 (제2 범주) 장· 차관(급) 공식 서한, 연설문, 외국 정부/국제기구에 발송하는 공식 문서, 기관 홍보 자료

를 갖지만 민간 분야 번역 시장의 시장 원리에 의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번역도 공공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공공 번역의 대상이 모두 표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 등의 번역은 문학 번역과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텍스트 번역에 대한 번역자의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문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만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지명, 공공 시설물 등의 용어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번역되면 이는 곧 지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안내에 실패하는 것이므로 표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번역에서 표준화의 대상은 텍스트라기보다 공공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 용어는 공공 번역 과정에 활용되고 또한 번역 결과물의 수준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용어 통일 및 표준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공공

12) 공공 문서의 분류는 우리나라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다.

번역의 주요 대상이다. 이러한 공공 용어에 대한 번역은 사용자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추어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일차 목표로 한다.

현재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에서는 비슷비슷한 공공 번역 관련 프로젝트나 연구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중복 발주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가 반복적으로 번역되고 서로 다른 번역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용어 표준화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점이다. 실제 번역 과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를 위해 번역 및 표기 지침도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등에서 서로 다른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발해 내놓고 있다(표 3) 참조).

[표 3] 기관별 공공 용어 번역 기준 현황

기관명	예규지침	공개 및 활용
안전행정부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 방법	도로명 주소 누리집(www.juso.go.kr): 영문(로마자) 주소 표기 방법 안내 및 개별 주소에 대한 영문 변환 서비스
국토교통부	도로 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한 공개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2013. 7. 26.)	규칙 공개 후 의견 수렴 중(~2015. 12월)
서울특별시	주요 기관명과 지형지물 등에 대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표기 기준안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을 통한 공개
한국관광공사	지자체업계 범용 영일중 외국어 표기 지침(2013)	책자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관광 안내 표기 용례집(2005) • 음식 메뉴 및接客 회화(2012) • 외국어 음식 메뉴 용례집(2011)
한식세계화재단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2012)	한식 세계화 누리집(http://koreanfood.net): 한국어(한글, 로마자),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베트남어 등 9개 언어로 한식명 번역

[표 4] 문화용어의 기관별 영어 번역 실태

구분	대웅전	향교	서원
문화재청 영문 누리집	Daeungjeon Hall	Confucian School/ Confucian-shrine Academy	Confucian School/ Confucian-shrine Academy
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재 용어사전)	Hall of the Great Veneration	local public school annex to a Confucian Shrine	private Confucian Academy
한국관광공사 관광 안내표기 용례집	Daeungjeon Hall/ Hall of Sakyamuni	Confucian School	Confucian Academy
한국관광공사 전자 지도	Main Hall	Confucian School	Confucian Academy
국사편찬위원회 역사 용어 시소러스	Hall of Sakyamuni	Local Confucian School	Confucian Academy
서울 시청 영문 표기	Hall of Sakyamuni	Hyanggyo	
국립중앙 박물관			Private School/ Private Academies
한국학 중앙 연구원	Main Hall/ Hall of Sakyamuni	County School	Private Academy/ Confucian Academy

이들 기관들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지침 및 기준을 상호 통합 조정하지 않은 채 각각 사용함으로써 [표 4]와 같이 서로 다르거나 상충되는 번역어를 양산하고 있다.

공공 용어 번역 표준화를 담당하는 단일 주체가 좀 더 폭넓은 전문가 팀을 운영하여 통합적으로 지침을 개발했다면 별도의 표준화 작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우리 사회에 공공 용어 번역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공의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인 예산 및 인력 활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 면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4. 공공 용어의 번역 표준화 방안: 지명 표기를 중심으로

지명은 현재 여러 기관에서 번역안과 이에 대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국내외 외국인이 가장 자주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알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명확하고도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동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번역 원칙이 상이하어 일관되지 못한 표기가 흔하고, 지자체별 원칙에 따른 표지판 표기, 지도상 표기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 표지판은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지만 관할 지역 내는 지자체 소관, 도로명 주소 표지판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각 기관의 표기 지침에 따라 번역되어 한강은 도로 표지판에서 Hangang(Riv)로 표시되지만 서울시 관광 안내판에서는 Hangang (River) 또는 Hangang River로 표기, 국토교통부가 펴낸 전자지도에서는 Hangang으로 표기되고 있다.

음차역과 의미역 병기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며 심지어 한 기관에 서조차도 실제 번역 사례에서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존에 통용되어 온 표기 방식과 로마자 표기 방식 혹은 기관이 제안하는 새로운 표기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양상이다.

여기서 표준 표기는 하나의 기준점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다른 표기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용어의 표준화는 공공의 소통을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단일 기준보다 용도별 번역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활용도가 크다. 기본 원칙을 적용한 기본형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간편형(도로 표지판 등 공간 제약이 있을 때), 설명형(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때)을 사용하는 등 여러 표기형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¹³⁾

[표 5] 기존 번역 지침의 용도별 활용안

용도별	관광 안내, 지도 표기 등	도로명	도로 표지판	문화재명
관련 기관	서울시, 관광공사, 국토지리정보원, 문화재청 → 원칙 통합 필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기준 및 표기 방법	고유명사(로마자) + 보통명사(의미번역)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 방법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
형태	기본형	-	간편형	설명형

기관 간의 이견 최소화를 통해 번역 기준을 통합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기관(국토교통부의 지명 표기 제외)에서 로마자 표기 뒤에 번역어를 추가하여 표기¹⁴⁾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번역어를 표기하는 방향으로 영문 표기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 기관 간의 차이를 좁힌다면 아래와 같이 로마자 표기와 번역어를 표기한 형태를 기본 형태로 제시할 수 있겠다.

기본 원칙: 고유명사(로마자 표기) + 보통명사(의미 번역)

- 낙동강 Nakdonggang **River**, 불국사 Bulguksa **Temple**
- 대호방조제 Daeho Bangjoje **Embankment**

13) 문화재청의 인공 시설물 표기 기준에서는 불국사를 Bulguksa Temple로 표기하지만, 도로 표지판 등 공간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Bulguksa와 같이 축약된 형태로, 문화재 소개 책자 등의 자료에서는 Bulguksa, Temple of Buddha Land와 같이 설명형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4) Hangang River(문화재청), Hangang(국토부), Hangang River(관광공사), Hangang (River)(서울시)

표준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번역 구성 형태가 통일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유형이 공존하는 번역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종로구청을 찾는 외국인 운전자에게 도로에서 보이는 상이한 표지판(Jongno District Office, Jongno-gu Office)은 혼란과 한국에 대한 불신마저 야기할 수도 있다. 한국어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로마자 표기¹⁵⁾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영터리 약어(영도구청 Yeongdo District Ofce) 등의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도 남아 있다.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약어를 많이 사용하는 도로 표지판 등에서 이러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데 번역 시 기준점을 제공하기 위해 지명, 관공용어 등의 약어 사전을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회사, 병원 등 시설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쓰고 있는 관용 표기를 지명으로 허용하지만, 종류가 같은 시설물을 해당 시설의 표기에 따라 달리 번역하여 쓰는 관광 자원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지명은 이와 같이 자연 지명, 인공 시설물 등의 표기 틀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 간의 차이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독특한 문화 전통에서 생겨난 문화 용어들은 두 언어 간의 문화적 부등성으로 인해 적절한 대역어를 만들기가 힘들다. 여러 기관에서 제시하는 문화 용어의 영문 표기는 번역의 목적, 번역 이용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번역안¹⁶⁾이 나오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 연유한다. 하나의 용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할 경

15) 봉천사거리 Bongcheonsageori, 광명사거리 Gwangmyeongsageori

1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역가들은 때에 따라 상위어, 해당 언어의 문화어로 대체, 풀어서 설명하기, 생략 등의 **자국화 전략**(해당 언어의 틀에 맞추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음차번역, 음차번역 후 설명 또는 주석 달기, 직역 등의 **이국화 전략**(번역 대상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우 이를 읽는 외국인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번역에서 말끔히 풀리지 않는 난제인 일대일 대응이 어려운 용어에 대한 번역 표준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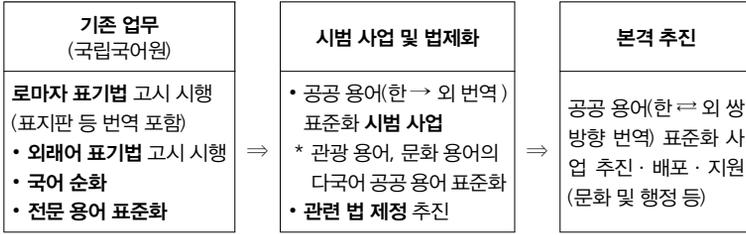
5. 향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2014. 2. 17.)에는 기존의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공공 용어의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일부로 설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공 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이 전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번역 인력을 포함한 전담 부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기존 언어 정책 업무를 공공 번역 업무로 연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해 현재는 번역 표준화에 대한 절차와 근거를 규정하는 국어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체계적인 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언어권별 공공 용어 번역 표준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분야별·언어권별 번역 지침 및 표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 기관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는 번역 기준안을 통일하는 작업은 번역 업무의 국가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 국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 용어 번역어 데이터베이스 관리·검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시간적, 경제적으로 번역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 오역을 막고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에 힘써야 하겠다.

번역물을 다량으로 생산해 내는 국제기구나 외국의 국가 기관들은 각 기관 내에서 생산되는 번역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 학문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문 용어와 고

[그림 2] 공공 번역(용어) 표준화 업무의 단계적 확장안



유 명사의 완성도 있는 번역안을 마련하고 이를 세계와 소통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참고문헌

- 강현석 외(2013), 《문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 정책 연구》, 국립국어원.
- 박경희 외(2007),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공공분야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번역원.
- 신정아·최용호(2012), 보편언어와 번역 공간, 《번역학연구》 13권 4호, 한국번역학회.
- 신지선(2007), 공공 기관 번역 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 8권 2호, 한국번역학회.
- 양명희(2014), 국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국어 기본법 제정 이후의 국어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0, 우리말글학회.
- 이승재 외(2001), 국내 공공 기관의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2권 2호, 한국번역학회.
- 정호정 외(2013), 《공공 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국립국어원.
- (주)팬트랜스넷(2010),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 문화재청.